

강진 '과태료 폭탄' 공포

수협 조합장 보선 금품 살포 속속 드러나

조합원 16명 자진 신고…경찰 조사 확대

전임 조합장의 비리로 치러진 강진 수협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금품이 살포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과태료 폭탄'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 일로 '지역의 명예와 이미지 손상'을 우려하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체 조합원이 강진군 인구의 5%인 1천944명에 달해 이번 사건의 여파가 강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강진군 선거관리위원회와 강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금품수수 관련 자수 안내장을 발송한 이후 16명의 조합원들이 선관위와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적발된 조합원들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금품 살포

혐의(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지난 5일 고발되면서 사퇴한 A씨 측으로부터 수만~수십만원씩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조합원 중에는 수백만원을 받아 다른 조합원들에게 나눠 준 이른바 '조작자'들도 3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선관위에 적발될 당시 갖고 있던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에 표시가 돼 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역민들은 금품 살포의 실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강진읍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48)씨는 "전임 조합장이 비리로 물

러났는데도, 막대한 돈을 써가면서 당선되려고 하는 것을 보면 그만큼 돈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면서

"돈 선거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수협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진군청 공무원 C씨는 "조합원들의 손자가 워낙 많아 강진지역 전체로 사건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면서 "더 이상의 금품 수수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전체

진실화해위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에 의해 살인 누명을 쓰고 힘든 삶을 살아온 이정근씨 사건에 대해 국가에 재심을 권고했다.

18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5·18 당시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정근(62·사진)씨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결정 심의·의결 결과, 정부가 진실 규명을 위해 사과조차·재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6년 11월 진실화

해위에 사건을 의뢰했고 지난 3일

상무대 영창서 폭행치사 혐의 더해져

진실화해위 '이정근 사건' 재심 권고



주진위원회 회장의 도움으로 박씨의 가족들을 만나 화해하고 진실화해위에 사건을 의뢰했다.

진실화해위로부터 자신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 보상, 5·18 유공자 등의 문제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씨는 "당시 군부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쓰고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 이 많다"며 "이제라도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동안 겪어야했던 아픔이 보상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주정차 과태료 기한내 납부 않을땐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과됩니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시행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정차,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개정 법률에 따르면 질서위반 행위자가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5%와 함께 증가금이 매월 1.2%씩 60개월 간 최고 77%까지 부과된다.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 지난 체납액의 합계가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관리사업이 제한된다.

또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고객 체납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하는 고객·상습 체납자는 최장 30일 까지 감자 청분을 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주정차위반의 경우 과태료 감경규정이 적용돼 의견진술 기한내에 납부할 경우 20%내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정후식기자 who@

국도 1호선~광주 남구 대촌동 3.9km

4차로 확장 7년 만에 완공

169억 들여 선행 개선도

국도 1호선~광주 남구 대촌동간 3.9km의 4차로 확장 및 도로선행 개선공사가 7년만에 완료됐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남구 대촌동사무소~국도1호선(광주~목포) 대촌입구간 3.9km 중 포총사 앞~대촌동사무소간 2.4km가 부분 개통된 데 이어 대촌입구~포총사간 1.5km가 최근 완공됐다.

지난 2001년 착공된 이 공사는 지금까지 1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2차로인 도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선행을 개선해 주행 안전성과 광주 남부지역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 공사는 광역위생매립장 주변지역의 균형개발 촉진 및 주민숙원 해소를 위해 국도 1호선 행림마을~시 경계간 도로 확장공사(4차로→6차로) 등과 병행 추진돼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이 도로 개통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대촌·송촌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낙후지역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경평가 미이행 사업장 13곳 적발

영산강환경장 장마철 건설현장 특별점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장마철 토사 유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 전남지역 13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3월29일부터 6월5일까지 광주·전남지역 및 경남(하동, 남해)지역 일대 도로건설, 택지개발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건설 사업장 5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였다.

점검 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미이행하고 있는 사업장 13개소를

업장에서는 초기우수 처리시설 설치 계획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아 적발됐다.

광양시 H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 및 보관기준 등을 적발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철이 다가온 만큼 환경적으로 민감한 대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 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점검을 강화해 환경 피해 예방과 친환경적 개발이 이뤄지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필승기자 kps@kwangju.co.kr

인터넷주소체계 지원 공모

광주시 전국 1위

광주시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2008년 공공기관 차세대인터넷주소 체계(IPv6) 장비지원 공모'에서 1위를 차지, 3억3천700만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

시는 18일 "전국 14개 기관이 참여한 이번 공모에서 광주시가 1위를 차지, 오는 20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IPv6는 현 인터넷주소체계(IPv4) 자원 부족에 대비하고 보안성이 강화된 양방향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기술이다. /정후식기자 who@

세기보청기, 세계 속에 우뚝서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 세기보청기

세계보청기 - 세기보청기

1588-5555 771-0100
1588-5555 771-0100